

식순

일정	내 용
15:00~15:10	접수 및 안내
15:10~15:20	인 사 말 : 김경호(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송기춘(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취지 설명 : 강은옥(인권옹호관)
15:20~15:40 기조발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침해 사례 공표 현황 고희석(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장)
16:30~17:00 지정 토론	'공표'보다 '인권감수성'부터 키워야 김재균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
	학생인권침해 사례 언론공표에 대한 교원 의견 소병권(전북교총 정책실장)
	사례 공표를 통한 예방효과 강화 방안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학생인권 침해 사례 공표 1년, 실태와 문제점 김종표(전북일보 교육부장)
	사례 전파 및 언론공표는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심호빈(이리여고 학생, 前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16:30~17:00	질의 및 자유토론
17:00	정리 및 폐회

기조발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침해 사례 공표 현황

고형석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장

I.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이하 “조례”라 함)의 제정

- 조례 제정 전 상황

-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 2006년 제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회기만료로 폐기)
- 2008년 제18대 국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폐기)
-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박노현)
- 2010. 10. 5.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최초)
- 2012. 1.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2. 1. 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 조례의 제정

- 2010. 6.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공약
- 2011. 10. 5. 교육감 조례안 부의(2011.11.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 2012. 9. 28. 교육감 조례안 부의(2013.2.21.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 2013. 2. 27. 도의원 장영수 직권상정 무산
- 2013. 6. 18. 도의원 김연근 조례안 발의(교육위, 찬성4, 반대4, 기권1)
- 2013. 6. 25.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조례 통과(찬성 35, 반대 6, 기권 1)
- 2013. 7. 12. 조례 공포(제3781호) · 시행

- 조례 제정이후 갈등(조례에 대한 소송)

- 2013. 7. 22. 교육부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제기(교육부) : 2013추98
- 2015. 5. 14. 대법원 결정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여 그와 같은 권리가 학생에게 보장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불과할 뿐,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조례의 이해

- 구성 : 총칙, 권리목록, 이행기구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성

- 총칙 : 목적, 정의,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책임과 의무

「대한민국 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 권리목록 : 붙임 자료 참조
- 이행기구 : 자문기구(학생참여위원회), 심의기구(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실행기구 또는 사무국(학생인권교육센터) 등 3개 기구

II.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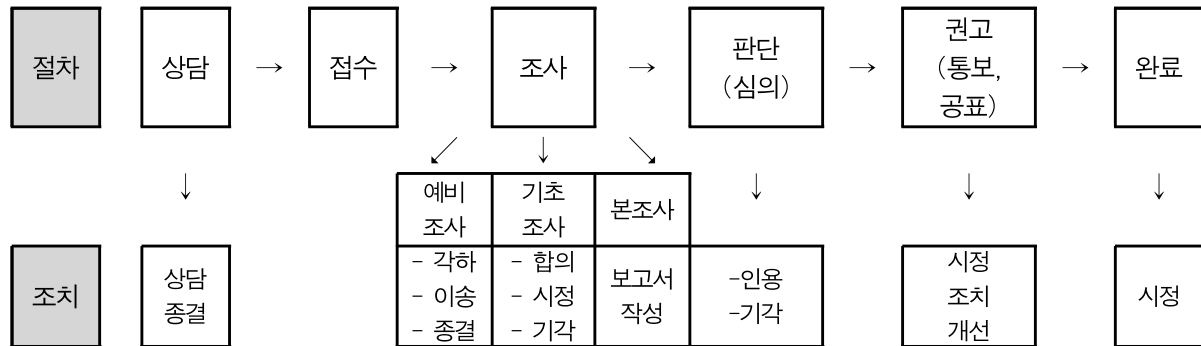
◆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이해

- 조례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라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센터
- 2014. 8. 1.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개소(2015. 6.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소재의 센터로 이전)
-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 수행
 - ※ 인권옹호관(조례 제43조, 제45조)
- 상임 1인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 임기 2년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요구,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위의 내용에 대한 공표, 학생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구제팀의 업무

- 학생인권상담 : 대면상담, 전화, 우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
 - ※ 조례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 구제신청의 접수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의 접수
- 학생인권침해 조사 : 자료요구 및 질의, 현장방문조사 등
 - ※ 조례 제50조(조사)
- 구제신청 처리 : 각하, 기각, 인용(시정권고, 합의종결) 등 종결처리(언론공표)
 - ※ 조례 제4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 학생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 흐름도



◆ 상담 및 조사 통계

2014. 11. 1. ~ 2015. 11. 30. (민원은 2014. 8. 1.부터임)

구분	상담				조사					
	상담	민원	신청	합계	조사중	조사종결				
						각하	기각	인용	기타	합계
누계	169	73	78	320	8	32	4	33	1	70

III.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표

◆ 공표의 기능(취지)

- 공표의 첫 번째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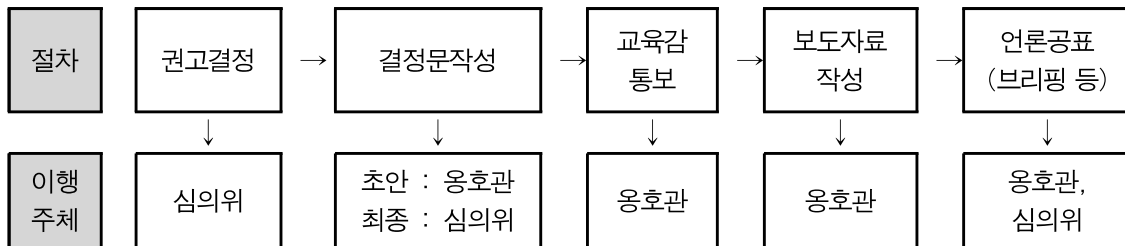
- 조례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에서는 인권옹호관은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적절한 시정과 조치 등을 요구(제45조)할 수 있고, 제49조(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과 조치)에서는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므로,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고”를 하고 있음.
- “권고”의 내용을 수용·이행할지 말지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 그래서, 권고내용에 대한 수용·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표”의 권한을 조례는 부여하고 있음.

- 공표의 두 번째 기능

- 조례의 각 조항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학교구성원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타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임.
- 그래서, 학교구성원들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를 하고 있음.

◆ 공표 절차 및 흐름도



◆ 공표 관련규정

조례
<p>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p>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p> <p>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

[시정권고 등의 내용]

○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구제신청인 또는 해당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시정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송달한다. 결정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원상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구제조치
- ③ 인권교육의 수강 등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④ 피신청인 및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
- ⑤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⑥ 기타 학생인권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정권고 등의 공표]

○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교육감에게 시정권고를 하였을 경우, 인권옹호관은 시정권고 등 조치 내용의 요지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익명으로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등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공표는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의 배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언론공표 현황

- 인권옹호관은 시정권고를 취한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익명 결정문을 게시하고 있음.(조례 제49조 제4항 관련) 언론에 공표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총 7건, 19개 사건

순번	제목	일시	관련사건
1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발표	2014.12.8.	14-직권-00001
2	지시봉으로 툭툭 · 교무실 앞 세워두기 인권침해	2015.2.10.	14-직권-00002 14-학인-00001 14-학인-00004
3	교사, 수업중 학생 따돌림...인권침해	2015.3.12.	14-학인-00011
4	학생 양말 문 사진 홈페이지 게시 '인권침해'	2015.6.29.	15-직권-00002
5	상습 체벌 이유로 학생 자퇴 '학습권 침해'	2015.6.29.	14-학인-00013

6	일상적 학생 체벌, 학교에서 종교의식은 '인권침해'	2015.8.27.	14-학인-00022 15-직권-00001 15-직권-00004 15-학인-00001 14-학인-00017 15-학인-00021
7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게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2015.11.19.	15-학인-00030 15-학인-00031 15-학인-00032 15-학인-00036 15-학인-00038 15-학인-00042
합계	총 7건		19개 사건

-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 지침」에 따라, “① 익명으로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등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돌아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표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예외 조항이므로, 예외를 적용할 만한 사건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없음)
- 언론에 공표하기 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당사자(피신청인, 신청인, 해당학교 등)에게 결정문을 배부하고, 언론공표가 됨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음.

◆ 공표에 대한 민원 또는 불만제기

-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고, 익명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경우, 다수의 언론에서 이에 대해 취재·보도를 하고 있음. 언론보도 후, 관련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교사들의 항의가 있었음.
- 항의의 주된 내용은, “① 비록 익명처리하여 나가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②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③ 언론에 나가는 사진 및 화면을 살펴보면,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게되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언론에 공표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사항 (2015. 11. 26. 제7차 회의)**

- 일부 학교구성원들의 불만·항의의 내용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례에 따른 공표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므로, 본 토론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차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임.

붙임 : 보도자료 모음

※ 참고자료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관련 조항 및 구분

조항		권리
총칙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행복추구권 등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권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학습권, 자기결정권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알권리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안전권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휴식권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17조(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복지권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권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급식권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건강권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적법절차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상담신청 등

보도자료 2014. 12. 8.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	--

<문의> ☎ 063-239-3753,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관 이충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발표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A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2014. 10. 27.(월) A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센터는 이를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11.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1. 5.(수), 6.(목), 14.(금) 총 3일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권조사 결과는 11. 26.(수)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4. 10. 27. 8교시(16:00경)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 A학교 교사 C는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식칼을 사용하여, 그 칼의 칼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상완부위를 각 2대씩 때리고, 칼날부분으로 뒤편에서 왼쪽허벅지를 각 2대씩을 때려, 위 학생들 중 1명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cm 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사 C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후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식칼(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의 문제는 A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14. 11. 26.(수) 전라북도교육감에게는, A학교 C교사에 대하여 징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할 것과,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 대하여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A학교장에게는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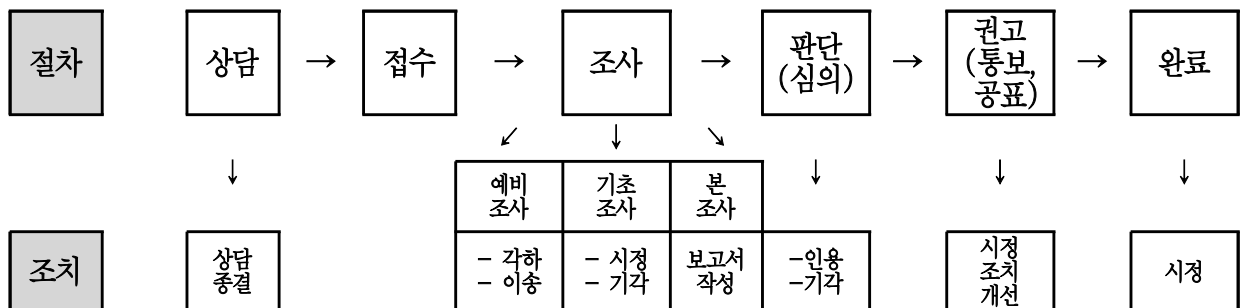
인권옹호관은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관련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붙임 :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의 종류 및 조사구제 절차 1부. 끝.

붙임 1.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의 종류 및 조사구제 절차

구 분	방문조사	직권조사	구제신청조사 (실지조사)	실태조사
관 련	조례 제45조 제1항 제3호 등	조례 제45조 제1항 제2호	조례 제27조, 제45조, 제49조, 제50조	조례 제33조, 제45조 1항 4호
조사주체	인권옹호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위임	인권옹호관	인권옹호관	인권옹호관 또는 외부수탁기관
조 사 수행방법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 또는 위탁
조 사 전제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분야별 실태파악)	인권침해가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등 요건구비	인권침해 관련 광범위한 조사
조사실시 검토	심의위 의결	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접수	심의위 의결
결과 조치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교육 및 업무추진 자료로 활용
특 징	예방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	사후적 권리구제	예방적 권리구제
조사시 제약 사항	조사시 입회 허용 피조사기관의 협조 사전 통지	사전통보 입회 불가	입회 불가	시설 방문시 관계직원 동반
의 의	학교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 적극적 접근 센터 촉진자 역할	취약집단에 대한 센터의 적극적 업무 수행	일반 학생의 구제신청권 보장	다양한 인권문제 및 인권실태 파악

※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 흐름도



보도자료

2015. 2. 10.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063-239-3752,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관 김종기

지시봉으로 툭툭 · 교무실 앞 세워두기 ‘인권침해’

담임교사, 학급실장 일방적 임명 · 기숙사 사감 일상적 욕설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2015. 1. 16.(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전준형, 이하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아래와 같이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일상적인 툭툭치기, 꿀밤은 인권침해

A중학교 교사 B는,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서,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30cm 가량의 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등의 체벌 행위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매(또는 지시봉)로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정도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를 훼손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체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 학급실장을 담임교사가 임명하는 것은 인권침해

A중학교 교사 B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서 2014학년도 1, 2학기 실장, 부실장을 학생들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실장, 부실장 등을 선출할 때는,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은 인권침해

ㄱ고등학교 교사 ㄴ은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일상적으로 “새끼”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욕설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끼” 라 함은, “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 ② ‘자식(子息)’ 을 얹잡아 이르는 말. ③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ㄴ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사용한 것은 ③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사건번호 : 14-학인-00001)

- 체벌은 인권침해

□중학교 교사 ○은, 2014. 10.경 학교 교실에서 학교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데기’ 를 사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쇄골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 학생을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세워두는 것은 인권침해

□중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학생을 세워둠으로써,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장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인권교육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5. 3. 12.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063-239-3753,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관 이충민

교사, 수업 중 학생 따돌림...인권 침해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기(구제신청 사건 14-학인-00011)되어, 2015. 2. 13.(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고 담임교사가 지시

2014. 11. 24.(월) A초등학교 6학년 0반 담임인 B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B교사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 C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 4명을 불러 C학생이 한 이야기를 쓰도록 하였다. C학생이 한 이야기의 내용은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등이었다.

2014. 11. 26.(수) B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B교사가 이야기한 ‘뒷담화를 까는 애’ 는 C학생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2014. 12. 1.(월) B교사는 C학생이 한 이야기 때문에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였다.

B교사는 자신이 “반성하라”고 지도하였음에도 B학생이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B학생의 좌석을 교실 뒤편에 배치하여 홀로 앉도록 하였다. 또한 B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던 학생들을 불러, “B에게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혼냈다. 그리고 학급 학생 전원에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써라”고 하였다.

- “놀지 마라”는 지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교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학생을 훈육·훈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B교사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C학생과 놀지 말 것’을 지도·지시하여 C학생을 학생들이 따돌리도록 조장한 것(C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불어 B교사는 C학생과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강요한 행위이므로, 위 학급 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위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

C학생이 친구들에게 B교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수업을 받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 방식, 지도 방식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B교사는 C학생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C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B교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급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C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할 것인지 여부(사과 혹은 반성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C학생에게 이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교사는 C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학생의 좌석을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C학생과 어울렸던 학생들을 혼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C학생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 불안감, 모멸감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C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일기장 검사 및 B교사의 행위는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

위와 같은 사건은 B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일기장 검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교사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및 해당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5. 6. 29.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 063-239-3754,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관 김종기

학생 양말 문 사진 홈페이지 게시 ‘인권침해’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조치 권고 결정

2015. 5. 14.(목)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전준형,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생 경위

2014. 3. 경 A초등학교 4학년 ○반의 담임교사 C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학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 7.경 그 반의 B학생이 욕설을 하자, C교사는 위 학급규칙에 따라, 학급 교실에서 B 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이를 입에 물게 하고, 또한 B학생의 한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하여,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C교사는 2014. 7. 21.(월) 위 사진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학급앨범)에 게시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행위는, 해당 학생에게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고, 심리적·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으므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인격권(조례 제3조)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진을 찍은 것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적인 정보를 만들어낸 행위이고, 이러한 사적인 정보를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4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건에 대한 조치

C교사는 신규임용 및 교사로 재직 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교사가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C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하며, 학교누리집 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학교누리집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5. 6. 29.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063-239-3754,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관 이충민

상습 체벌 이유로 학생 자퇴 ‘학습권 침해’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조치 권고 결정

2015. 5. 14.(목)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전준형,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기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사건(14-학인-00013)에 대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건의 발생 경위

2014. 4. 21.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C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때리고,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또한, 2014. 9.경에는 D학생이 수업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위 학생을 지도하면서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4대 때리고, 2014. 10.경에는 E학생이 수업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위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의 머리를 지시봉으로 1대 때렸습니다. 이 외에도 B교사는 수시로 A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손바닥과 지시봉으로 때렸으며, 이러한 B교사의 행위에 대해 A고등학교에서는 2014. 4. 30.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고, 2014. 10.경에는 B 교사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지시봉을 제출하도록 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2014. 7. 10. C학생은 위 학교를 자퇴하였는데, 자퇴의 여러 가지 사유에 B교사의 체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고등학교의 F교사는 G학생이 2014. 7.경 교실 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불을 꼬집었으며, 2014. 11.경 H학생의 복장에 대해 지도를 하면서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으며, 학생 5명이 수업에 늦은 것을 지도하면서 복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정도 시키는 등 평소 학생들에게 열차려 행위를 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판단

B교사와 F교사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한 것이 명백하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B교사는 C학생의 자퇴사유 중 하나가 B교사의 체벌이었으므로 C학생의 학습권(조례 제5조)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건에 대한 조치

A 고등학교의 B, F 교사가 평소 학교장으로부터 체벌금지에 대해서 전달 받았고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B, F 교사가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위 교사들이 받은 인권교육이 실질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B, F 교사의 행위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5. 8. 27.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063-237-0355,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팀장 고흥석

일상적 학생 체벌, 학교에서 종교의식은 ‘인권침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정환경조사, 수치심을 주는 흡연지도 등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2015. 7. 30.(목),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라 함)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 관련

○ 꿀밤을 주고 빗자루로 허벅지를 때린 것은 인권침해

A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인 B는, 2015. 3.경 자신의 반 C학생의 머리를 때려(꿀밤) C학생의 머리를 붓게 하였다. 또한, 2015. 4. 21. 2교시 쉬는 시간에, C학생이 교실에서 2회 뛰어다녔다는 이유로, 교실에 있던 빗자루를 사용하여 C학생의 허벅지를 때려, C학생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와 같은 체벌행위로 인하여 학생은 모욕감 또는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므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B교사의 체벌의 경위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라북도교육감

(이하 ‘교육감’ 이라 함)에게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14-학인-00022 결정)

○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은 심각한 인권침해

A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례 1]

A고등학교 B교사는, 2014학년도 자신이 맡고 있는 1학년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점수에 따른 학생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성적이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주걱 또는 조릿대나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아리를 2~3대씩 때렸다.

또한 2014. 3. 경, 위 1학년 ○반의 학생들(15명가량)이,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아 해당 교과 담당 교사에게 혼나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들을 엎드려뺨쳐 시키고,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를 3대씩 때렸다.

B교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들을 학교 규정에 따른 등교시간보다 10분 일찍 등교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지각하면 ‘60cm가량 나무주걱’ 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를 2~3대 정도 때렸다. 특히 자신의 반의 C학생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한 달에 2~3회 정도 체벌하였다.

위와 같은 체벌로 인해 C학생이 힘들어하자, 2014. 10. 초 C학생의 학부모가 “C학생을 때리지 말고 다른 벌로 시행해 달라” 고 요청하였음에도, B교사는 C학생이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허벅지를 5대씩 때렸다.

이후 C학생은 “학교폭력(교사체벌)으로 인한 환경전환” 을 이유로 전학을 갔고, B교사는 C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2]

A고등학교의 D교사는, 주로 학생들이 과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드럼채와 비슷하게 생긴 ‘30cm 가량의 나무재질의 지휘봉’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 앞부분을 1대씩 때렸다.

그러던 중, 2014. 11. 14. D교사는 1학년 ○반 수업을 하면서, 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십여 명의 허벅지 앞쪽을 지휘봉으로 1회 때리고, 학생들에게 책을 가져오도록 한 후, 학생들이 책을 가지고 온 순서대로 1대씩 추가하여 학생들을 때렸다. 가장 늦게 책을 갖고 돌아온 위 C학생에게 “6대를 맞으라”고 말하고, C학생의 허벅지 앞부분을 1회 때렸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C학생이 항의하자, C학생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C학생의 뺨을 때렸다.

D교사는 C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례 3]

A고등학교 E교사는 2014학년도 1학년 부장을 맡았는데, 2014. 3. 경, 나무주걱을 구입하여 나무주걱에 캐릭터와 이름을 넣어 그림을 그렸고, 이것을 1학년 각반 교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무주걱을 받은 일부 교사들은, 이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였다.

E교사는 학생들이 줄거나, 수업분위기를 망치고 장난을 하는 경우에, 위 나무주걱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렸다.

[판단]

위 B, D, E교사뿐만 아니라 A고등학교의 상당 수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나무주걱이나 다른 도구(지시봉, 조릿대나무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와 무릎뒷부분을 때리고, 손을 사용하여 학생의 뺨을 때렸

다.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 특징이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그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체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고등학교 교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나무주걱 및 손 등을 사용하여 C학생 및 다른 학생들(이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체벌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침해, ② 체벌을 당했든지,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모욕감 및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조례 제3조) 침해, ③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C학생이 진료 및 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건강권(조례 제25조) 침해 ④ 교사들의 체벌로 인해 진료를 받고, 위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C학생의 학습권(조례 제5조) 침해

[권고 내용]

위 B, D, E교사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는 위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위 교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여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학교장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A고등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위 교사들의 주장 및 행위 등을 살펴보면, 평소 체벌에 대한 무관심, 체벌의 효과에 대한 과신, 체벌도구에 대한 희화화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학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차원에서는 무조건 때려야 한다, 말로만 혼내서는 절대 듣지 않는다’ 는 등의 의견이 상당수 확인되는바, 학생들 역시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교사 및 학생들의 체벌(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립하도록 A고등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A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교육관련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인권우호적인 방향으로 학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A고등학교장에게 위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15-직권-00001 결정)

○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2015. 4. 20. A고등학교 B교사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4명의 학생들(피해자)을 발견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 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3. 점심시간에 위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면서 피우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뭇거리자, B교사는 위 학생들에게 “싸다구를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 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위와 같은 상황을 당시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였다.

학교는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에서도 중점적으로 흡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흡연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일이나, 위와 같이 학생들을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시킨 것은,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교사의 지

도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 위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 것은 B교사에 의해 강요된 것이고,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요를 받아 담배를 피우게 된 학생들의 수치심의 강도는 매우 크다고 보아, B교사의 위 행위는 위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A고등학교는 공개적으로 학생들(피해학생들, 학생회 임원 등)과 협의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학생들이 받은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15-직권-00004 결정)

2.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침해 관련

○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

2015. 3. 경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이하 ‘보충수업’이라 함) 교육활동 동의서’, ‘방과후 자율학습(이하 ‘야간 자율학습’이라 함)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 2학년 22명, 3학년 34명(총 63명, 5.6%)이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27명, 2학년 48명, 3학년 46명(총

121명, 10.8%)이었다.

학교에서 제출받은 동의서 중,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하여 자필 서명이 된 것이 상당수 있었다. 이는 ①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내지 않고, 동의서를 나눠 준 자리에서 학생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여 바로 제출시킨 경우, ② 실제로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보냈으나, 학생들이 학부모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대신 서명하여 제출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 경우였다.

또한, 위 학교는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하면서 교과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5과목만을 선택하여 일괄 배정(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 학교에서 정함)하였다. 특히 수학 확률통계 과목(이과만 해당)의 보충수업은, 원래 정규교과 진도를 진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의 진도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동의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학교의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 외에도, 자신이 희망하지 않았지만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학교가 2015학년도 보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이 정규교과 시간과 마찬가지로 보충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A고등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의 방식은 학생들의 ‘정규교과시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위 학교의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참여여부를 다시 물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학습 및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례 전파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했다.(15-학인-00001 결정)

3.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관련

○ 공개적으로 가정 환경 조사는 인권침해

A중학교 B교사는, 2015. 3. 9.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가정환경(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B교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정학생을 지목하여 “너 아니냐?”(해당학생이 아니냐는 의미)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4~5명의 학생들이 다시 인권침해라고 항의하자, 결국 B교사는 조사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한 것으로서, A중학교 3학년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는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하고, 또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14-학인-00017 결정)

4. 종교의 자유 침해 관련

○ 학생지도 시 종교관련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인권침해

A교사는 2015학년도 B중학교(공립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 총 6개 학급의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A교사는 2015. 3. 초순경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식(기도)을 한 후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A교사는 B중학교 2학년 ○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 학급의 학생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냈다.

또한, 2015. 4. 초, C학생이 ‘○○○○○○○’ (A교사가 다니는 교회와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C학생을 교실에서 상담하면서 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1시간가량 C학생과 종교적 논쟁을 하였다.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 및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 역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A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의식을 행하였고,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을 상담하면서, 해당 학생이 믿는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적 논쟁을 하였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敎分離의 原則)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 및 B중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교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역사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아, 해당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중학교 2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야 하는 학교의 특성과, 성장기의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A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교육감에게 A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종교를 가진 교사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 및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교육감에게 B중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 및 B중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15-학인-00021 결정)

붙임 : 참고자료(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 요약) 1부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요약(2015.7.30.)

순번	사건번호	사건개요	학교 구분	결정내용	보도 자료
1	15-학인-00022	교사가 3학년 학생을 체벌함(3월 손으로 꿀밤, 4월 빗자루 허벅지)	초/ 공립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침해 : 신분상 처분 권고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대책 수립	1
2	15-직권-00001	교사들이 학생을 일상적으로 체벌함(학칙 체벌규정 존재, 학년 담임교사들 동일한 매[나무주걱] 존재 등)	고/ 사립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 주의의무 소홀로 인권침해 발생 : 교사들 및 교장 신분상 처분 권고 일상적 체벌이 만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위한 별도 대책 수립	2~5
3	15-직권-00004	흡연지도시 점심시간에 학생들(4명)을 급식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지시	고/ 사립	인격권 침해 : 신분상 처분 권고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대책 수립	5
4	15-학인-00001외 4건 병합	강제 보충 및 자율학습	고/ 사립	정규교과기간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침해 : 현재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이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 할 것을 권고(제도개선)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대책 수립	6~7
5	15-학인-00017	2015. 3. 9. 3학년 ○반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드는 방식으로 학생들 가정환경 조사	중/ 사립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 신분상 처분 권고 개인정보 관리 대책 수립 권고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수립	7~8
6	15-학인-00021	교사가 수업진행 및 생활지도시 기도를 하고, 학생과 이단논쟁을 하고,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음.	중/ 공립	학생들 종교의 자유 및 학습권 침해, 권리 소홀 인권침해 발생 : 교사 및 학교장 신분상 처분 권고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대책 수립	8~9

보도자료

2015. 11. 19.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정책공보담당관 공보담당 ☎ 239-3161 (hongbo@jbedu.kr)

<문의> ☎063-237-0355,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강은옥, 조사팀장 고흥석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게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용의·복장,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 등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2015. 9. 24.(목),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는 학생인권 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함)가 상정한 사안들에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학생의 얼굴을 때린 것은 인권침해

2015. 6.경 2교시 후 쉬는 시간에, A중학교 교사 B는 C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B교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학생을 상담실로 불러 손으로 C학생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15-학인-00031 결정)

2. 체육수업시간 중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둔 것은 인권침해

2015. 5.경 A초등학교 B교사는 1교시와 3교시 체육수업시간 2시간 동

안, C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였다. 그 날 전북지역 평균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가량이었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학습권,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15-학인-00038 결정)

3. 다른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2015. 7. 경 A초등학교 2학년 0반 담임 B교사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C학생이 D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C학생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C학생이 발버둥을 치다가 B교사의 뺨에 상처를 내자, 감정이 격해진 B교사는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B교사는 C학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고 말하면서,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거 C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C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라고 하였으며, 몇몇 학생들이 차례로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과 해당 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권교육 등)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15-학인-00042)

4.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인권침해

A중학교 B교사는 C학생이 소속된 학급과 그 외 여러 학급의 수업을 맡고 있는데, 2015. 4.경부터 약 두 달 동안, C학생이 소속된 학급 외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하면서 해당 반 학생들에게, ‘C학생이 학급 실장이 된 것은 담임선생님이 좋아해서 된 것이다’, ‘C학생의 담임 교사가 C학생을 어떤 동아리에 넣으려고 다른 학생을 빼고 넣었다’ 는 등 C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C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15-학인-00032 결정)

5. 학생이 다른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례1]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용의복장 및 소지품 검사

A고등학교는 2015. 6.경 학생들의 교복을 하복으로 교체하는 날 07:20경부터 08:20까지, 학생들로 구성된 선도부 34명(정문 18명, 후문과 기숙사 16명)을 배치하여, 학생 2명씩 1조가 되어 학생들의 등교 지도(학생들의 머리, 교복치마 길이 검사 등)를 하였다.

[사례2] 학생을 통한 학생 일괄소지품검사

2015. 7.경 A고등학교 2학년 0반 담임 B교사는, 학생들에게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5교시 수업 시간 중 약 20여분 동안, 3학년 선도부 학생 4명을 시켜 학생들의 가방 및 책상 등을 검사하게 하고, 위 선도부 학생들은 검사를 하면서 해당 반 학생들의 몸을 수색하였다.

위와 같이 학생이 다른 학생의 용의·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학생 간 불신, 불화, 갈등 등을 일으켜 학교폭력 등 또 다른 문제를 야

기할 수 있고, 학생이 같은 학생에게 지도를 받을 경우, 특히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에게 지적받을 때는 교사에게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심한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용의·복장, 소지품 검사 방식은 학생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선도부 운영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15-학인-00030, 15-학인-00036 결정)

6. 구제신청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준 것은 인권침해

‘2015. 6.경 A중학교 B교사가 C학생을 체벌하였다는 내용의 사안(15-학인-00031)’에 대한 구제신청이 있어, 센터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자, B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C학생을 조롱하는 내용’과 ‘C학생을 조종하는 어른을 찾아내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사안 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느낀 불쾌감 등을 학생들에게 표현하고 C학생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한 것으로서, C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B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권고하였다.(15-학인-00032 결정)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토론 1

[학생인권침해 사실 공표에 대한 검토]
‘공표’보다 ‘인권감수성’부터
키워야

김재균 |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

I. 인권[人權, human rights]과 인권침해사례

1.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2. 인권과 권리

첫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장하는 권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중립용어로 공동의 이익 또는 공동선을 위할 때 인권이 되는 것이다. 착취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해고, 노동법을 악용한 대량해고, 착취 등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여 농성이나 파업투쟁을 하면 인권 현상이지만,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겠다고 욕심을 내거나 자본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집단폐업 등을 하는 것은 사적 권리의 표출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인권은 아니다.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 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은 존엄,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을 띠는 이상 누구도 함부로 인간의 존엄한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포괄한다. 그러나 권리라고 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법적 권리이면서 사적 이익과도 직결된 권익적 성격이 짙다. 인권은 공익적 권리인 반면 권리는 사적 권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인권이 권리를 포괄하고 때로는 권리가 인권을 포함하므로 맥락에 따른 적합한 이해로 사익추구를 인권으로 혼동해서 사회정의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3.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 사례

(문제) 다음 중 학생인권침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1) 야간자율학습을 밤 11시 반까지 시행한다. 학교 쪽은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받은 것일 뿐 ‘무언의 압박’을 느낀 학생들은 다 동의했다.
- 2)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한다고 했다. 한 학생이 학교 밖 교복가게에서 사려고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부장 교사가 그 학생을 포함해 공동구매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일일이 전화해 ‘왜 참여하지 않느냐’고 꼬치꼬치 물었다.
- 3) 전교 30등까지만 들어가는 심화반을 따로 운영한다. 단, 야간자율학습과 유료로 진행하는 보충수업에 의무로 참여해야만 한다. 교내 논문대회도 심화반 아이들만 참가할 수 있다.
- 4) 전교생의 동의하여 머리를 귀밑 5cm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답)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세 문제(1~3번)는 학생인권침해에 해당되나 4)번은 인권침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1)번은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¹⁾, 2)번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²⁾, 3)번은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및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³⁾를 위반하였으나 4)번⁴⁾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항에 어긋나나 제3항에 의하여 학교의 규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학생인권침해가 아니다.

II. 학생인권침해사실 공표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 시행 후 2012년 광주, 서울에 이어 2013년 7월 12일 제정, 공포한 전북까지 총 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이다.

-
- 1)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3)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4)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개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인권침해사실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북, 경기, 광주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⁵⁾는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의무)규정을 둔 반면 서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공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⁶⁾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공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표를 통한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면서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조례에 따르면 인권침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이므로 “권고”의 내용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등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알지 못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표를 통해 첫째로 권고내용에 대한 수용·이행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로는 학교구성원들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알려,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즉, 침해사실 공표는 학부모나 학생에게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 인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침해시 구제할 수 있는 사후적 처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부모나 학생은 학생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학생인권센터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이러한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5) 전북, 경기, 서울의 조례명은 ‘학생인권조례’이고, 광주교육청의 조례명은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임

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0조(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 ④ 교육감은 제3항의 보고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언론을 통해 다수의 사람에게 공표하다보니 공표 내용을 통해 해당 학교 및 신청인, 피신청인 등을 유추할 수 있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인권센터에서 인권 침해 사안 결과에 대하여 언론에 공표하고 익명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하여 교사의 인권을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다수의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Ⅲ. 인권침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주장하는 권리이며,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가 침해받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권고사항의 공표로 또 다른 사생활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최소화할 수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신청인으로부터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왔을 때 처음 조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과정 또는 그 이전에 신청인의 신분이 피신청인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하여 주변에(특히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⁷⁾ 이는 학생인권 교육센터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어기는 행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둘째로, 권고사항의 공표하는 시기와 횟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록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례 중심으로 공표한다 하더라도 취재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 언론에 나가는 사진 및 화면을 통해 해당 학교가 밝혀져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로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재학 중인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따라서 인권침해 사실을 공표하되 시기를 정하여(1년에 2번 정도) 공표함으로써 신청인 및 피신청인, 해당 학교 등의 사생활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표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표하는 방법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홈페이지 게시와 언론에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공표하고 있다. 또, 익명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을 보면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해당학교 등을 찾아내기가 매우 쉽다고 할 것이다. 또, 언론에 배포하다보니 해당 학교가 노출되기가 쉽다. 따라서 자세한 자료보다는 결정문을 요약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언론에 배포하지 않는 것을 제안해 본다.

7) 2015.08.23. 00신문, “전북교육청학생인권 ‘헌신짝’ 취급”

2015.09.20. 00신문, “교육청에 신고해?...가만두지 않겠다.”

2015.12.07. 00신문,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대응 문제점 노출”

넷째로, 연수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의 현주소는 걸음마 수준이라 할 것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이러할 진데 학생인권보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인권이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 등의 자치회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침해사례의 권고사항을 학교에 수시로 보급, 교직원 자체연수 등을 통해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이다.

〈참고 : 위키백과,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참교육연구소〉

[참고 자료]

학교의 현주소

2014년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 기간 : 2014. 9. 15 ~ 10. 4.
- 대상 : 전국의 중고생 5,845명
- 추출방법 : 지역별 임의 할당
- 설문기관 : 전교조참교육연구소

○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시도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운동 경험이 거의 없었거나 교육청이나 의회에 의해 학생인권정책이 가로막힌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 침해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칙 개정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학생의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학생인권 문제와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상벌점제로 인한 폐해 등의 문제의 경우, 모든 지역의 경험률이 대동소이했다.

○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 때 그 때 다름” 뿐더러,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다. 벌점제의 남용 및 자의적 운용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는 폐해가 여전함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참담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와 같이 학교가 차별적, 억압적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수가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움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 각 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할수록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해 인권침해 경험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감정에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 답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의견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학생들 대다수가 우리 사회에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 사회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 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를 함께 뽑았다. 교육청이 정책적 목표를 갖고 단시간 안에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핵심업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의무이자 이번 조사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지정토론 2

학생인권침해사례 언론 공표에 대한 교원 의견

소병권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실장

I. 조례의 한계와 교원과 학생인권보호 제도 정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2013. 7. 12. 조례 제3781호)는 두 번의 교육위원회 부결사태와 관련하여 김연근 의원(안)이 직권상정되어 제정되었고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례에 따라 2014. 8. 1. 구성되어 개소되어 각종 민원 사항등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직권조사에 따라서 도교육감에게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있음

참고사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5조, 제49조, 제50조 조문내용발췌

출처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8.8.] [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8.8., 타법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7. 학생 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8>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4.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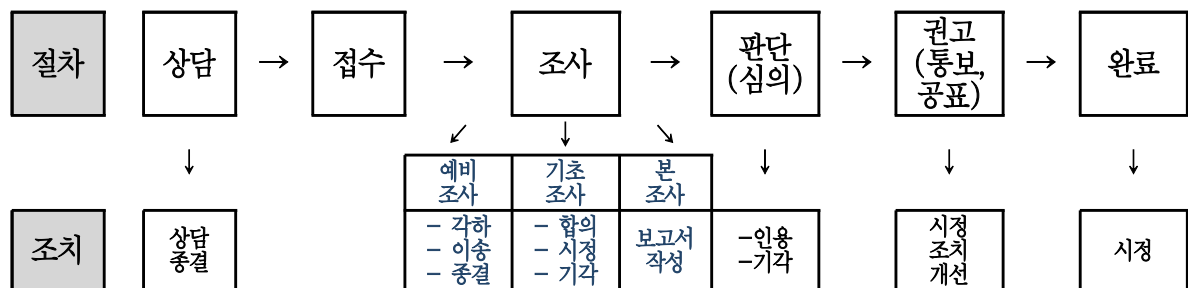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정치권의 일방적 직권상정에 의해서 그동안 수차례 논의되어 오고 개정되고자 했던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는 형사법에 준하는 막강한 처벌 근거권을 가진 조례가 되고 언론 공표권을 가짐에 일부 악성 민원인이나 조사 및 처벌 주체에 따라 악용되어질 소지가 있기에 신중히 적용되어야 함

II. 여론 재판과 법적 방어권 박탈 논란

□ 학생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 흐름도



□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는 일단 민원을 근거로 하고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이 주를 이루기에 민원 위주의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불만이 제기되며 조사보고서 및 시정권고 조치에 의해 인사상 권고 조치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징계조치등을 내림

□ 전라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재판 기관이 아니기에 조사 후 소명 기회등을 충분히 주지 않고 단순 징계 확정 절차만 하기에 당사자인 교원은 이를 설명하거나 검토할 절차가 미비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단순 서면 증언이나 보충 질의외에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다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아래 표와 같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사후 총 7건, 19개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를 했다. 하지만 이는 과연 조사결과대로 모두 진실일까?? 해당 사건들중에는 징계후에도 이를 불복하여 소청등으로 이어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고 학교의 정보가 공표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공표현황〉

순번	제목	일시	관련사건
1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발표	2014.12.8.	-생략-
2	지시봉으로 툇툴 · 교무실 앞 세워두기 인권침해	2015.2.10.	
3	교사, 수업중 학생 따돌림...인권침해	2015.3.12.	
4	학생 양말 문 사진 홈페이지 게시 '인권침해'	2015.6.29.	
5	상습 체벌 이유로 학생 자퇴 '학습권 침해'	2015.6.29.	
6	일상적 학생 체벌, 학교에서 종교의식은 '인권침해'	2015.8.27.	
7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게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2015.11.19.	
합계	총 7건		19개 사건

□ 교원의 징계 및 신분상 처분은 징계위원회 확정 후 소청-행정심판등 법의 판결을 받는 절차등이 남아있는데 신분상 처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언론상 공표가 이루어져 언론재판을 먼저 받고 이러한 여론이 신분상 처분(징계처분)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에 부적절함

III. 제도 개선 제안

□ 조례 정비가 필요하고 공표시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권고를 받고 추가 소명 절차 및 인사상 조치 완료 후로 시기 조정이 필요함

□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사건이라고 해도 추후 형사 고발등을 통하여 사건등의 내용등이 바뀌는 경우 있음

□ 기자회견을 통한 특정 사례 위주의 기자회견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여 개인 명예훼손 및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상 감사 사례 및 소청 사례집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출판물로 인정된 바 사례집 등을 통한 보도 전파가 나올 수 있고 그 안에서 개개인별로 발췌등을 하여 보도등을 해도 될 수 있음 전북교총에서 12. 7. ~ 12. 8. 약 24시간동안 긴급으로 실시한 임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반 교원들이 아직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언론공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에 오히려 이에 대한 추가적 안내가 필요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고 현재의 언론공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높은 데이터가 나왔기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추후 학생인권이라는 특정적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학교안의 인권, 교원의 인권보호에도 일면을 말아야 한다. 현재 학생인권 사안은 상당히 복잡해서 교권침해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데 교원인사과는 겨우 담당 장학사등이 조사권한도 없이 단순 사실조사정도에 그치고 추후 감사과에 넘기거나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 해당 교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다든지 교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기에 이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음

□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등은 학교안의 안전성 강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를 동일 기구의 두 팀이 맡아서 양쪽의 측면을 고려하여 맡을 소지가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참고자료〉 교원의 학생인권침해사안 언론공표에 대한 교원 의견조사(긴급)

일시 : 2015. 12. 7 12:00 ~ 2015. 12. 8. 12:00

대상 : 전북교총 회원 응답수 89명

Q1: 귀하의 교육 경력은?

답변한 수: 89 건너뛴 수: 0

보기	응답	
5년 미만	5.62%	5
5년 이상~10년 미만	6.74%	6
10년 이상~20년 미만	25.84%	23
20년 이상	61.80%	55
총계		89

Q2: 전북학생인권센터에서 교원에 의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한 수: 88 건너뛴 수: 1

보기	응답	
예	44.32%	39
아니오	55.68%	49
총계		88

Q3: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교원에 의한 인권침해사안을 언론에 공표하는 사실에 찬성하십니까?

답변한 수: 89 건너뛴 수: 0

보기	응답	
예(찬성)	12.36%	11
아니오(반대)	87.64%	78
총계		89

Q4: 위 3번) 질문에 찬성한다면 어떤 이유로 찬성하십니까?

답변한 수: 16 건너뛴 수: 73

보기	응답	
언론 공표가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6.25%	1
교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31.25%	5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50.00%	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50%	2
총계		16

Q5: 위 3번) 질문에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십니까?

답변한 수: 79 건너뛴 수: 10

보기	응답	
언론 공표가 학생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52%	17
교원의 권위를 너무 약화시킨다.	39.24%	31
너무나 과장된 내용이 기사에 들어간다.	30.38%	2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8.86%	7
총계		79

Q6: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현재 사건별 정권고시마다 언론공표를 하는 데 어떻게 개선하기를 바라십니까?

답변한 수: 87 건너뛴 수: 2

보기	응답	
현재 같이 시정권고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야한다.	3.45%	3
분기별 연 4회정도 모아서 해야 한다.	17.24%	15
연도별로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시 하는 것이 좋다.	66.67%	58
더욱 더 강하게 해야 한다.	2.30%	2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0.34%	9
총계		87

질문 7.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으신가 의견을 적어주세요. 에 대한 답변 Case 33

Num ber	Response Text
1	이미 학생들은 누릴수있는 권리를 대부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이 너무나 과잉보호 되는것 같습니다. 교사의 권위나 학교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와 교사가 무엇을 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2	학생인권과 함께 선생님들의 교권도 함께 상생했으면 좋겠다.
3	가해자로 지목되어진 교사의 인권보호대책은 없다.
4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이 선행되고 진정한 인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학교 안에 있는 교사 일하시는분 학부모 등등 모두가 소중한 인권이 있음을 알게하는 정책을 해주세요
5	교권과 인권이 균형있게 처리
6	인권을 옹호하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해서 선생님들께 통보하고 법으로 제정하라
7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등하게 균형있게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야한다
8	학생인권과 교원의 측면을 고려하여 침해 여부 사안 등을 메뉴얼화하여 학교에 안내, 연수등 필요
9	감정개입없이 정확하게 발표하고 교권 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학생인권 정책을 펼쳐야한다.
10	학생인권 보호가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권위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를 외면하게 됩니다.
11	어떤 강압적이고 고도 권위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조사하는 센터에서 원인을 잘 분석하여 서로 소통하고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어드바이스해주는 정도로 업무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12	좀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사안 조사와 함께 개선시 정부분 공유
13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추락한 교권 확립을 우선시 하는게 중요.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운 점 감안
14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방향의 교육관
15	문제아가 있거나 아님 학습 방해가 되는 학생이나 유아는 따로 그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교육을 했음 좋음
16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17	교사 인권 감수성 연수. 혹은 교육의 정례화
18	상담,치유에 중점 둘 것
19	교권신장도 함께 할 수 있음 좋음
20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 할 수 있는 학생
21	각자의 의견 조정을 충실히 해주세요
22	권리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23	교권도 생각하셔야지요 한둘 잘못된 사례로 전체 교원을 판단하는 언론플레이는 학생교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24	교원의 인권도 고려하여 조화롭게 나아가야 한다
25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교원연수를 강화해주시길
26	학생인권 존중이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되어 교사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7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균형점을 이뤄야함
28	학생과 교원 모두가 중시되어야한다.전북은 너무 학생들만 편중시한다.교권위원회도 즉시 설치하라
29	교사의 인권도 인정받는 정책이 필요 — 교권이 너무 추락하여 미래가 암울함
30	학생인권을 누리기 위한 책임과 역할 강조
31	학생인권 침해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과정을 빼고 결론만 본다면 왜곡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며, 추후 재발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
32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자료또는 인권강사 지원을 해줬으면 함
33	지나치지않게..모두가 가.피해가되는 상황이 되지않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정토론 3

사례 공표를 통한 예방효과 강화 방안

장세희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학생인권으로 말해본다면 ‘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고, 학교의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온다’일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이 만들었지만 인권은 만들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인권은 하늘이 준 선물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권리도 아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수많은 억압들에게 피의 땀가를 치르고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기에 인권에서 말하는 권리는 정확하게 아는 만큼, 투쟁하는 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은 결코 인권적이지 않았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학생인권 역시 학교가 선물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어른들이 허용한 권리도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교나 어른들이 허용하는 만큼의 제한적인 권리어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인권의 역사가 투쟁의 역사이듯이 지금 이 자리 역시 진일보한 학생인권을 위한 투쟁 과정 중의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공표에 대한 민원 또는 불만제기가 그 주제이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고, 익명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경우, 다수의 언론에서 이에 대해 취재·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 후 관련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교사들의 항의가 있었고 항의의 주된 내용은, “① 비록 익명 처리하여 나가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②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③ 언론에 나가는 사진 및 화면을 살펴보면,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게 되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언론에 공표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공표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비록 익명 처리하여 나가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도 그러한 이의 제기는 수없이 있어왔다.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수를 올려서

이슈화 하려고 하는 단체의 이기심이 아니냐는 지적도 수없이 받아왔다. 정말 그럴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성단체에서 그동안 수없이 제기해 온 성폭행 및 성추행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에 따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행이나 가벼운 성추행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다.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여성 인권에 대한 관점의 성숙으로 보아진다.

학생인권의 관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공표의 첫 번째 기능은 “권고”의 내용을 수용·이행 할지 말지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권고 내용에 대한 수용·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표”의 권한을 조례는 부여하고 있다. 공표의 두 번째 기능은 조례의 각 조항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학교구성원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타 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여,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학교구성원들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를 하고 있다.

동시에 학생인권 조례에는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① 익명으로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 신청인, 피 신청인 등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전북 학생인권센터에서 언론에 공표한 현황은 총 7건, 19개 사건이고, 전북 학생인권 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표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므로, 예외를 적용할 만한 사건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전북에는 1,300여 개교, 26만명이 넘는 학생 수가 있다. 이에 비하면 총 7건, 19개 사건 공표 현황은 대단히 미미하게 보여 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표에 관한 문제제기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북학생인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진다.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가혹하다는 것이 공표 그 자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처리하는 학교 측의 미성숙한 태도로 인해 당사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며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감추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왜 피해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사례별로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감지조차 하지 못하는 곳이 학교와 교육청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그나마 언론에 공표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도

아닌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더욱 관심이 멀어질 것이고 유사행위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2.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학교에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

인권의 역사에서 인권은 단 한 번도 조용히 발전한 경우는 없다.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의 파장을 불러왔기에 사회 기득권자에게 인권 운동은 늘 불편했다. 하지만 인권에서 “저항권”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어떤 저항이 조용히 진행되었던가? 어떤 저항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던가? 묻고 싶다.

인권 교육 때 사용하는 동영상 중 하나인 ‘조용한 자부심’을 보면 흑인들이 버스 안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381일 동안 월요일에 버스를 타지 않고 30~40km를 걷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정중한 대우, 흑인 운전자 고용, 먼저 온 사람이 빈자리에 앉기’였다.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 4만여 명의 평범한 흑인들이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그 먼 길을 381일 동안이나 걸었다. 이 비폭력 저항운동의 과정에서도 100여명이 체포되고, 12번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죽임과 해고와 협박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381일 만에 버스 안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에 이른다.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소한 버스에서의 차별 거부, 일상에서의 차별 거부를 위한 투쟁은 참으로 험난하기만 했다.

이 투쟁의 성공요인은 무엇이었을까? 4만여 흑인들이 기어코 쟁취한 버스 안에서의 차별 거부 투쟁 성공요인이 흑인들이 381일간 벌인 비폭력 투쟁에 백인이 감동했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물론, 감동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여론 형성에 도움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철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 큰 이유는 버스 회사 수입의 타격이 아니었을까? 월요일 하루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음으로 오는 버스 회사의 결손액이 결국 그들을 손들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토론자는 보여 진다. 결국, 저항권은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위해 어느 정도의 타격을 현장에 가할 수 있는가? 토론자가 볼 때는 미미하다. 그래서 인권 조례가 무력해 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전주 모 고등학교 야구부 사례이다. 전주 모 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야구부 감독이 폭행했다. 야구부는 수요일마다 핸드폰을 받고 외출을 할 수 있다. 외출 후 기숙사로 돌아와 10시까지 핸드폰을 반납하게 되어 있다. 피해학생이 수요일 저녁 외출 후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 9시 30분 쯤 청소를 하고 있었다. 감독이 술 마신 상태로 기숙사로 들어와 왜 핸드폰을 왜 반납하지 않느냐고 컵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나게 한 후, 피해 학생에게 피를 닦으라고 했다. 학생이 나중에 코치에게 말하고 병원에 가서 머리 2바늘을

깨냈고, 117에 전화해서 신고하였고 감독은 해임이 되었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300만원의 벌금도 나왔다. 하지만 감독은 이에 불응하여 형사소송은 항소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학교 측 서류미비로 부당해임 판정을 내고 12월 9일 내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해 학부모가 야구부 감독에 대한 범죄 사실을 열람했더니 음주, 업무과실치사, 교통법위반, 폭행에 관한 4건의 범죄 경력이 있었다. 야구부 감독은 그동안 피해학생에게 공식적인 정중한 사과나 합의전화가 없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너 때문에 4개월 동안 감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학교 내에서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피해학생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상황을 접수하고 학교 측에 권고하고 언론에 알리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폭력의 두려움은 오히려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

모 초등학교의 사례를 하나 더 들고자 한다. 초등 2학년 담임교사가 심하게 욕을 한다고 한다. 모든 말 끝머리에는 ‘에이 0발’이 붙는다. 이 선생님에게 ‘에이 0발’ 정도의 욕은 표준어라고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상담이 들어왔다.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께 사정을 알렸으나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고 2015년 12월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 교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왔다.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조차 학부모들은 알지 못했다.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하면 시정될 수 있느냐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질문 앞에 필자는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여전히 초등 2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언어폭력에 지금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최후 수단이 파업이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2학년 학생 전원이 등교거부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아직 학생인권을 위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포는 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공포로 인해 학교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일까? 피해자의 관점일까? 학교 관리자의 관점일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혼란스럽지 않고 정착되는 인권은 없다는 것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12일 공포되고 이제 겨우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권리들도 녹록치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전북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진다. 이 혼란의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견뎌낸다면 학생인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성숙함에 한걸음 더 나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서둘러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을 포기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3) 언론에 나가는 사진 및 화면을 살펴보면,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게 되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언론에 공표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음.

학생인권의 권리에 대해 선언은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뒷받침하는 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다면 학생인권을 형식화하고 추상화 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더 이상 무슨 명예가 필요한 것일까? 학교의 명예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 남아 있다면 누구를 위한 명예인가?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언론에 공표하지는 말아달라는 속뜻은 불편한 진실을 감춰달라는 것으로 들린다. ‘학교의 명예’ 이 말자체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사고다.

인권발전의 역사를 볼 때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곳에 인권의 발전은 없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조금의 예외는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알려진다는 것은 불편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공표함으로 학생의 인권이 더 침해받는다는 말은 어쩌면 학교 측의 대응이 그만큼 미숙함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라북도 학교현장의 인권감수성은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변화하려고 몸부림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인이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 권력자에게 어떤 고결한 양심이 있어 약자의 인권이 보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편해졌기에 시정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많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을 지키는 어른의 몫일 것이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은 앞으로 더 많이 불편해야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난감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학교는 공표를 통해 인권침해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가해자를 치유하는 교육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듯이,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학교권력 역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인권은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저항권과 함께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저항권 속에 발전해 나갈 것이다. 좀 더 다양한 저항권이 보장될 때 인권이 보장하는 풍요로운 권리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지금 ‘학생인권 옹호관’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저항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해야 할 것이다.

III. 나가면서

법이 언제 약자의 편에 있었는가? 법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어쩌면 이 공표의 화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학교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 최소한의 조처인 공표도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는 학생인권의 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흔히 말한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 다시 묻고 싶다.

너무 심한 건 안 되고, 조금 심한 건 가능한가? 한 대는 되고 백 대는 안 되는가? 약자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에서 조금 더 강한자의 인권도 무참히 짓밟히기 마련이다. 학생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학교는 교사의 권리도 무참히 짓밟힌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곧 나의 인권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곳에서 교사의 인권 역시 포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권에 중립은 없다. 중립을 내세울 때는 대체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입시라는 거대한 괴물을 정점으로 불평등과 야만으로 얼룩진 학교 현장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센터는 좀 더 명확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받고도 아이들은 왜 말하지 않을까? 말해보야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아직도 학생들에게는 그런 곳이다. 노동자의 최고 그리고 최후 권리는 총파업이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조직된 힘으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수업도 거부해 보고, 담임도 거부해 보고, 학교장도 거부해 보는 등 학생인권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 때 다시 오늘의 화두인 “공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의 모든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지정토론 4

학생인권 침해 사례 공표 1년, 실태와 문제점

김종표 | 전북일보 교육부장

I. 인권침해 사례 공표의 필요성은

1. 사례 공표 취지

- 사회적 논란 속에 제정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담보
- 구체적 사례 명시 및 전파를 통한 예방 효과
- 교사 및 학생의 인권 감수성 향상
-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계의 의지 피력

2. 예상되는 부작용

- 해당 교사 및 학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 교사 및 학교의 명예훼손 우려
-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오해
- 자극적 보도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정적 이미지, 신뢰도 추락

3. 타 시·도의 사례

1) 학생인권 조례 제정 :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민주시민교육과 소속)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2) 인권침해 사례 공표 (조례의 규정)

- △ 서울특별시 :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교육감에 대한 권고 등 - “공표할 수 있다.”
- △ 경기도: 인권침해 사건 조사 후 시정권고 등 조치 내용 - “공표하여야 한다.”
- △ 광주광역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감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전라북도: 인권침해 조사 및 조치 내용 - “공표하여야 한다.”

II. 학생인권 침해 사례 어떻게 보도됐나

□ 고교 교사가 흥기를 사용하여 체벌 (2014년 12월 공표)

△ 자습시간에 바둑?... 고교 교사 흥기 체벌하다 학생 상해

현직 고교 교사가 학생에게 처벌을 한다며 흥기로 위협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 고등학교의 A(실제 姓 명시) 모 교사(연

령 명시)가 흉기로 학생들을 처벌해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엌 칼’로 처벌한 교사, 경고만 받고 버젓이 근무 (영상 - 학교 전경)

이번엔 학교 교무실에서 벌어진 칼 부림 애깁니다.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부엌 칼로 별주다 학생의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사는 구두 경고만 받은 뒤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지난 10월 말 교사 A 씨가 교무실에서 학생 4명을 흉기로 처벌했습니다.

△ 흉기로 학생 처벌한 ‘위험한 교사’ (영상-학교 전경)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4명을 날카로운 과도로 처벌했고, 그 중 한 학생은 허벅지를 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교무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학교는 쉬쉬했다는 겁니다.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년부장 박 모 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남학생 2명과 구경을 한 2명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교사는 과일을 깎던 25cm 길이의 부엌칼의 칼등으로 학생들의 왼쪽 팔뚝을, 칼날로 허벅지를 2대씩 때렸습니다. “학생이 상해에 이르렀고, 그걸 교사가 직접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게 보고하지 않을 정도로...” (송기춘 /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장) 박 교사는 평소에도 플라스틱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처벌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박 교사를 두둔합니다.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툭툭툭 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학교 관계자)

□ 지시봉으로 툭툭... 교무실 앞 세워두기 (2015년 2월 공표)

△ 지시봉으로 머리를 ‘툭툭’...학생인권침해 행위

낮은 인권감수성이 더 큰 폭력 불러온다.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지시봉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 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욕설하는 행위는 학교 폭력일까?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또 학급실장을 담임교사가 지명해 임명하는 것도 학생을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세워두는 것도 학생인권침해로 봤다.

△ 지시봉 처벌·꿀밤·교무실 세워두기도 인권침해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두거나 가벼운 꿀밤을 때려서도 안 됩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9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넘겨받은 도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일상적인 ‘툭툭’ 치거나 꿀밤

교사가 지시봉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볍게 때린다거나 꿀밤을 때리며 지도를 하는 행위는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도 학생에게 수치심을 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신체의 자유,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 담임교사의 학급실장 임명

학생들의 선출이 아닌 교사의 지명으로 실·반장을 임명하는 것은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학생 양말 문 사진 홈페이지 게시 (2015년 6월 공표)

△ ‘아직도 이런 일이’...학생에 양말 물리고 뺨 때리고

전북 남원시 모초등학교의 4학년 A교사는 지난해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설을 한 B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하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후 사진 2장을 찍어 학교홈페이지 내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교육 경력 4년차의 이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만든 학급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아닌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이 금지돼 있고 체벌 및 방식도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전주시내 한 고교의 C교사는 지난해 4월 21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썼다는 이유로 D군의 뺨을 1대, 같은 해 9월에는 수업 중 졸았다며 E군의 목덜미를 4대 때렸다. D군은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결국 자퇴했다.

△ 담임이 학생에 양말 물려 사진 찍어 게시 (영상)

초등학교 교사가 친구에게 욕을 한 학생에게 양말을 물게 하고 그 모습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 모 초등학교, 지난해 7월 이 학교 4학년 A교사는 같은 반 친구에게 욕을 한 B군에게 양말을 벗어 입에 물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하고 아무리 한 약속이지만 양말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남원 모 초등학교 관계자)

△ 전북교육청 “인권 인권 외치더니” 양말 입에 물리고...뺨 때리고...

전북 교육계가 사랑해온 학생인권보호조례가 공포된지 꼭 1년이 됐다. 전국적으로 단 서너곳에만 있는 독특한 자치법규로, 전북지방의 조례는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큰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교편을 앞세운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모양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29일 어린 제자들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남원과 전주시역 초·중등 교사 3명을 처분해달라고 전북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 가운데 남원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4학년)의 양말을 벗겨 입에 물리고 손에는 빗자루를 든 채 서있게 한 혐의다.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가 갓 교편을 잡은 20대 새내기인데다 인권교육 수강경험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교사와 학교장 모두 ‘주의’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공개적인 담배 강요 (2015년 8월 공표)

△ 수업시간 “기도 합시다”, 진화론 “미개해 안 가르쳐”

전북지역 공립학교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게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라 규정하며 가르치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학습권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학생이 통증을 호소하면 보건실로 보내기 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채 기도를 하게 했으며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면 기도를 해주고 보낸 뒤 1시간 후엔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기도하고, 학생과 이단논쟁...진화론 안 가르친 교사

전북지역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A교사는 올 3월 초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기도’를 하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 뒤 실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A교사는 이 학교 2학년 6개 학급의 역사 수업을 맡고 있다.

△ 교실서 종교의식·학생에 담배도 물게 해...인권침해 ‘심각’

전북 전주의 A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4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나는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말했다. 며칠 뒤 이 교사는 점심시간에 담배 냄새가 났던 4명의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불러 담배를 나눠주면서 피우라고 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지난 3월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한 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식(기도)을 한 후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교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흡연 강요한 교사 적발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다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한 교사도 적발됐다. 27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내 모고교 A교사는 지난 4월 20일 야간 자율학습을 감독하다가 4명의 남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았다.

△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 황당한 교사들 (영상)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공개적으로 흡연을 하도록 강요한 고등학교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고, 법으로 금지된 체벌을 공식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수시로 체벌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 교사가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게 지시 (2015년 11월 공표)

△ “너도 머리채 잡아 흔들어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복 지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학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며 보복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 7월 쉬는 시간에 B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C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말렸지만 B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를 떼어내려는 A 교사의 뺨에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발끈한 A 교사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그러고도 화가 덜 풀리자 과거에 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을 불러모았다. 그러고는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에게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했다. 이 말에 몇몇 학생이 B 학생에게 당한 것과 똑같이 폭행을 했다.

△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교사가 보복 폭행 지시도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친구를 꼬집거나 친구 머리를 잡고 흔드는 일이 잦았다. 지난 7월 24일에도 A군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담임교사 B씨는 A군을 떼어내던 도중, 발버둥 치던 A군에게 꺾혀 생채기를 입었다. 화가 난 B교사는 “너도 그럼 한 번 똑같이 당해봐라”며 A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B교사는 이어 A군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들을 불러 A군의 머리를 흔들도록 했다. 다수의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힌 A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서운 선생님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학생에게 보복을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전북도교

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도내 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 교사는 지난 7월 쉬는 시간에 B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C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했다. A 교사가 말렸지만 B 학생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서로 떼어내려는 A 교사의 뺨에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 이에 발끈한 A 교사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B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화가 덜 풀린 A 교사는 과거에 이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을 불러모았다.

△ 교사 맞아?...“너도 머리채 잡아 흔들어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사 3명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 학교 왜 이러나...학생에 보복 지시 (영상)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들에게 보복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초등학교입니다. (자막 00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이 학교 2학년 A교사는 지난 7월 같은 반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에 상처를 입자 가해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 학생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게 했습니다. “차오르는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선생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학교 관계자)

III. 언론을 통한 사례 공표, 문제점은

1.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 (당사자 특정의 경로)

- 구체적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언론의 속성
- 피해자 및 관계자의 언론사 제보
- 교육기관 관계자의 우회적 언급 (기자의 추론과 확인)
- 언론보도에 따른 지역사회 소문

2. 언론과 인권, 비교 분석

(1)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피의사실 공표죄)
-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관행적으로 범해오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인격살인)
- 국가인권위 :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에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6조)
- ◎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2)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요건

- ① 당사자 특정 : 기사 속 인물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가명이나 이니셜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당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구체적 사실 적시 :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보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평가 저하 :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나 직업 또는 직무에 해를 줄 수 있는 내용, 범법행위 등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사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 ① 공익성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② 진실성·상당성 : 보도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IV. 바람직한 사례 공표 방법 및 보도 방향

1. 어느 학교, 어느 교사가 아닌 ‘어떤 사례’에 초점을

학생인권침해 사례 공표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행위 재발을 막고 교사 및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몇몇 교사의 비상식적인 행위 자체가 언론에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되면서 뉴스 수용자들의 눈에는 교육현장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 이야기거리로 인식)

특히 교사에 의해 학생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했던 시기, 중·고교를 다녔던 40~50대에게는 공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2. 자극적인 표현 자제해야 (공표 기관 및 언론)

- 인권침해 사례를 공표, 보도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가급적 자극적인 표현(예: 식칼, 싸다구, 보복 등)은 자제해야 한다.
- 언론은 사건보도에 지켜야 할 준칙이 있다. (지금은 점차 무너지고 있지만...) 마약류 보도에 마약 이름을 특정하면 안 되고 칼은 흉기, 망치는 둔기라고 써야 한다. 범죄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3. 또 다른 인권침해 없도록

- 언론과 수용자들이 공표된 사례의 당사자와 해당 학교에 관심을 두면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생활 공간, 또는 업무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사생활 침해로 언론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자칫 사회적 편견이 부른 무분별한 여론재판, 언론재판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취지의 인권침해 사례 공표가 오히려 명분과 익명성을 내세운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표기관과 언론 모두 신중해야 한다.

지정토론 5

사례 전파 및 언론공표는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심효빈 | 이리여자고등학교 1학년

I. 서론

사례 전파 및 언론 공표는 권고내용에 대한 수용, 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 구성원들이 사례 전파 및 언론 공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익명으로 공표를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학교의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의견이다. 그렇지만 사례 전파와 언론 공표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알권리와 관련이 있다.

II.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

2013년 7월 12일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고, 2014년 8월 1일에는 학생인권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역시 인권의 주체이며,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학생들은 인권우호적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나는 2년 동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까지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낮은 인권 감수성 때문에 벌어진다.

과연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높을까? 위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체벌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들 모두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불참 시 어느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고등학생, 일기장을 쓸 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리기 싫어 검사용 일기장, 개인용 일기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은 주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학아직까지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체벌의 기준과 대상을 정하고,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낮은 인권 감수성 때문에 벌어진다.

과연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높을까? 위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체벌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생들 모두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불참 시 어느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고등학생, 일기장을 쓸 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알리기 싫어 검사용 일기장, 개인용 일기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은 주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조례에 대해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다. 지금 같은 질문을 다시 해도, 똑같은 답변이 되돌아 올 것이다. 전라북도 학생들은 학기당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권교육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한다.

III. 사례 전파 및 언론 공표의 효과

1.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인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인권교육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언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면, 자연스럽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사례에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에 뜬다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볼 것이다. 기사를 읽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어제 우리 반 전체가 화장품을 소지하고 다니는지 검사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인권 침해구나’, ‘저런 심한 인권 침해 사례가 학교에서 발생하다니, 지금부터라도 주위를 살펴 내 인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 해야겠어’ 와 같은 생각 하나 하나가 웹을 타고 전파해 생각 덩어리가 되면 우리들의 인권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월16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출처: 전라북도 교육청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 하나를 봤을 때 학교공동체의 인권 감수성이 얼마나 향상될까?

지시봉으로 툭툭 · 교무실 앞 세워두기 ‘인권침해’

담임교사, 학급실장 일방적 임명 · 기숙사 사감 일상적 욕설

학생인권심의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결정

2015. 1. 16.(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전준형, 이하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상정한 사안들에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일상적인 툭툭치기, 꿀밤은 인권침해

A중학교 교사 B는, 일상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면서, 청소를 게을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30cm 가량의 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등의 체벌 행위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매(또는 지시봉)로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꿀밤을 주는 정도는,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체를 훼손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체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 대상이 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 학급실장을 담임교사가 임명하는 것은 인권침해

A중학교 교사 B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서 2014학년도 1, 2학기 실장, 부실장을 학생들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실장, 부실장 등을 선출할 때는,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14-직권-00002)

-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은 인권침해

그중학교 교사 L은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일상적으로 “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욕설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분노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끼”라 함은, “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 ② 자식(子息)’을 알잡아 이르는 말. ③ (속되게)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L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사용한 것은 ③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사건번호 : 14-학인-00001)

- 체벌은 인권침해

□중학교 교사 O은, 2014. 10.경 학교 교실에서 학교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데기’를 사용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학생에게서 고데기를 압수하고 압수한 고데기를 사용하여 학생의 쇄골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 학생을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세워두는 것은 인권침해

□중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학생을 세워둠으로써, 어떠한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14-학인-00004)

위와 같은 학생인권침해가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해당 학교장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인권교육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읽기만 해도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출석부로 머리를 맞거나, 꿀밤 한 대 썩 맞는 것, 쉬는시간 마다 교무실 앞에 서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욕설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것이다. 기사를 읽다가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라는 단어를 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나의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언론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전파 속도는 매우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이 모든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인권침해사례가 공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무지한 상태일 것이며,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례공표와 알권리의 연관성이다. 사례공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

IV. 결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7조에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알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례 전파 및 언론 공표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이런 정보는 학교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전파와 언론 공표는 학교 구성원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